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26.(월)

□ 경남 기사

-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준공 (경남신문)
 - 감대산면 구혜리에 전국 최초 건립
- 창원시장 '선거법 1심 재판' 장기화 전망 (경남신문)
 - 오늘 창원지법서 9번째 공판 열려

홍보담당관실

경남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006면
종합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준공

대산면 구혜리에 전국 최초 건립
6·25전쟁 희생 경찰·호국영령 추모

함안지역에 전국 최초로 경찰승전기념관이 준공돼 호국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장소가 될 전망이다.

함안군은 지난 23일 오후 대산면 구혜리에 소재한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함안군은 6·25 전쟁 당시 대산면 구혜리 지역에서 낙동강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경찰·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2011년 6·25전쟁 참전 경찰승전기념탑을 건립했다. 이어 12억원을 들여 인근 부지 2014㎡에 연면적 99.39㎡ 규모의 기념관을 지난해 7월 착공,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조근제 군수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지킨 호국영령과 경찰관들이 희생된 역사적인 곳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돼 의미가 깊다"면서 "군 현충시설과 연계해 관광자원화하고,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 경무과 통보 >

부산일보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011면 지역

펜션 난간 무너져 추락 사고 투숙객 1명 사망·1명 중상

경남 사천시의 한 펜션 2층 난간이 무너져 투숙객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직장 동료인 40대 A 씨와 50대 B 씨는 25일 0시 20분께 사천시 마도동의 한 펜션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난간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약 4m 아래로 추락한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A 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또 B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펜션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 형사과 통보 >

창원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 주간작업 요구



강동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이 23일 오후 3시 창원시청 앞 인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협오수당 지급·임금인상 촉구 시 “요구사항 예산·절차 검토”

창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사이에서 창원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상 수집·운반작업은 주간작업이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시가 이를 어겨 노동자들에게 야간작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법 위반이 아니긴 하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시청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시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후 올해 1월부터 근무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소속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는 주간에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약된 업무 시간(오전 5시~오후 2시)이 아닌 오전 6시~오후 3시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자원순환과는 조례로 정한 사유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이미 전국 많은 지자체가 출근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폐기물 처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만큼 주간 근무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건설노임 단가 100% 지급 △물가인상률에 따른 소각장·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 9.2% 적용 △다이옥신과 날림먼지에 노출된 소각장재활용선별장 노동자 1인당 수당 월 25만 원 지급 △창원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별 임금 수준 동일 적용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에 관여하려면 제대로 관여하고, 손을 떼려면 완전히 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문제를 두고서 “다이옥신 노출 등에 따른 협오수당 지급은 새 계약 때부터 차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은 예산 사정과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석환 기자 csh@idomin.com

< 정보과 통보 >



밀양경찰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밀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율방범대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맞이해 자율방범대 성공적 안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치안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원 및 대원 4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양철우기자



김병두 거창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취임

거창경찰서 제4대 직장협의회 김병두 회장이 지난 20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회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김병두 회장은 취임식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직장협의회를 변화시키고,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창원시장 '선거법 1심 재판' 장기화 전망

오늘 창원지법서 9번째 공판 열려
증인신문 오는 9월까지 예정
선고 언제 내려질지 예측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26일 9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두 번째 재판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이 9월까지 예정돼 있어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 등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 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고, 지난 1월 26일 첫 공판을 한 이후 이날까지 재판이 9번 이어지고 있다. 공직 제안에 관련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 본부장 A씨,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홍 시장 측은 '자신이 공직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 못지않게 공직을 약속받은 혐의로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B씨가 애초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쟁점화하면서 증인신문을 펼쳐왔다.

지역 법조계에선 선거법에 따라 당초 6~7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판은 이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언제 변론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보면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8월 28일 오후 2시, 9월 11일 오후 2시에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고 각 증인의 출석기일을 맞추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선거법 270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시 규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참고기사 >

검찰, '옛 하동역 부지' 관련 하동군청 압수수색

속보= '옛 하동역 부지' 특정 업체 재매각'과 관련해 검찰이 하동군청을 압수수색했다.(15일 4면)

창원지방법검찰청은 지난 23일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상기 전 하동군

수와 관련, 감사원에서 윤 전 군수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2018년 10월 하동군수가 특정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해 구 하동역 부지를 레일 MTB(산악자전거) 사업 목적으로

매입 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라는 부당 지시를 했고 당시 A계장 등은 허위로 레일 MTB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하동군에 요구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참고기사 >

세아창원특수강 깔림 사망사고, 응급대처 부실 지적

치료 중 노동자 38일 만에 숨져
사내소방대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의료인력 없어 조치 늦고
이송 병원과 소통도 빨리 안돼

세아창원특수강 창원공장에서 깔림 사고를 당한 4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공장 내 응급상황 대응 체계는 있었지만 정작 현장 대응이 허술했다. 사고 당시 전문 의료인력이 없어 구조부터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아창원특수강 노동자 ㄱ(40)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10분 공장에서 파이프 품질 검사를 하다가 깔림 사고를 당했다. 무게 2.5t, 길이 4.5m 파이프 묶음이 ㄱ 씨 목 부위를 덮쳤다. 그는

5월 16일 세아창원특수강 파이프 깔림 사고 시간대별 대처 현황

08:10	공장에서 파이프 품질 검사 하던 40대 남성 깔림 사고 발생 무게 2.5t, 길이 4.5m 파이프 묶음 목 부위 덮침
08:14	재해 목격자 사내소방대 신고 목격자와 구조직원 119에 신고하지 않음
08:19	사내 구급차량 재해현장 도착 후 재해자 구조 (재해 현장까지 300m 거리였지만 신고 후 5분 뒤 도착)
08:24	창원파티마병원으로 출발
08:36	사내소방대, 창원파티마병원 쪽에 “곧 도착한다”고 연락
08:38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 도착
09:30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삼성창원병원으로 출발, 고용노동부 사고 사실 신고
09:45	삼성창원병원 도착
10:00	고용노동부 창원공장 현장조사 방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38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측이 확인해 준 시간대별 대응을 보면 구조 단계부터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ㄱ 씨는 동료 ㄴ 씨와 2인 1조로 작업했다. 하지만 ㄱ 씨는 사고 발생 후 4분이 지난 오전 8시 14분 동료에게 발견됐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운영하는 사내소방대는 5분 뒤인 8시 19분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내소방대는 신고한 ㄴ 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ㄴ 씨가 충격으로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ㄱ 씨에 대한 조치는 더 늦어졌다.

사내소방대가 6.8km 떨어진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오전 8

시 38분이다. 하지만 창원파티마병원에는 저체온 치료 장비가 없어 다시 6.3km 떨어진 삼성창원병원으로 ㄱ 씨를 이송했다. ㄱ 씨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35분이 지난 오전 9시 45분 삼성창원병원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ㄱ 씨 사망 원인을 세아창원특수강이 운영하는 비상 대응 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당시 사내소방대에는 전문 의료인력이 없었고, 제대로 된 구조를 할 수 없는 일반직원뿐이었다”며 “일반 직원들은 환자 이송 때 구급차량 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동 중 제때 병원과 소통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 국장은 “사내 소방대가 이송 병원으로 미리 전화하고 재해자 상태를 알

려야 하는데 병원 근처에 다다라서야 응급실에 연락했다”며 “응급 대응이 착실하게 진행됐다면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사고 발생 1시간 20분 뒤인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산재 사실을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분 뒤인 오전 10시 공장을 찾았다. 그날 세아창원특수강은 동종 업무 작업중단을 지시했고 열흘 뒤 작업을 재개했다. 이 회사는 1200여 명이 일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윤아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실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로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을 잃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csh@

낙동강환경청,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사업시행자 경동건설과 협의 완료
멸종위기 대홍란 서식지 원형보전
내달 10~20일 추가 생태조사 주문
환경단체 "환경보전 책임 회피한 것"
낙동강청장·평가업체 고발 검토"

속보= 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을 빚어 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협의 중단을 요구해왔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월 23일 5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주)과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동의는 개발계획에 동의하되 이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을 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관광개발계획을 실행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에 착수하기까지 승인기관(경남도)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보면, 낙동강청은 사업 시행 전 거제외줄달팽이·대홍란 서식지 원형보전과 팔색조 서식지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특히 환경단체가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던 '공동 생태조사'에 대해서는 승인기관(경남도)과 협의기관(낙동강청)이 추천하는 생태 전문가 최대 5인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단을 꾸려 오는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홍란'에 대해서는 '이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자생지는 최대 원형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식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이주 계획에 동의했다. 환경단체는 이식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주·이식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주)은 2017년부터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일대 369만3875㎡ 규모(해면부 39만8253㎡ 포함)에 골프장과 산악레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모태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8년 5월 2일 통과하고, 2022년 12월 환

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된 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쳤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부실 작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부실 평가 의혹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가 남아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환경단체는 평가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낙동강청장과 평가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종태 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서둘러 협의해준 낙동강청에 깊이 좌절한다"며 "경동건설과 같은 편인 경남도(승인기관)에 여러 조건을 달아 협의해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환경 보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거짓·부실 작성된 것으로 보여 평가서를 정밀 검토한 후 평가업체와 낙동강청장을 고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 조건인 멸종위기종 공동 조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전 훼손이 매우 우려되고 있어 낙동강청과 경남도청·거제시 등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참고기사 >

허수정 김해시의원 당선 후 금품 ‘무죄’

창원지법 “답례 단정 어렵다”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허수정(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 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허 의원이 금품을 건네기는 했지만 당선에 대한 답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허 의원은 2022년 6월 15일 오후 김해시 칠산서부동 김해농협 서부지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ㄱ 씨에게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게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허 의원과 함께 2020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정직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다.

허 의원은 “ㄱ 씨의 상황이 좋지 않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고, 형편이 나아지면 돌려달라고 했다”며 “농협에서 200만 원을 출금해 20만~30만 원은 제사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ㄱ 씨에게서 돌려받았고, 나머지 170만~18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ㄱ 씨도 “허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 의원이 ㄱ 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ㄱ 씨 상황이 좋지 않아 허 의원에게 하소연을 해왔고, 허 의원도 ㄱ 씨에게 평소 많은 선물을 받아왔다”며 “허 의원이 ㄱ 씨에게 준 돈이 당선에 대한 답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김정호 의원실에서 일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조직전략분과위원을 지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2022년 6.1지방선거를 통해 김해시의회에 입성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참고기사 >

박근생 합천교육장

박근생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22일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근생 교육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마약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근생 교육장은 다음 주자로 합천초강



미경 교장과 합천중 황인구 교장을 지목했다. 김명현 기자

‘NO EXIT’ 마약에 탈출구는 없습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이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의장은 우리 사회 깊숙이 마약이 스며들고 있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마약의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층과 저소득층이 마약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진주시의회도 정



책적·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진태 기자

경남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011면 사람

신현열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한국은행 경남본부 신현열 본부장은 지난 19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조근수 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 본부장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마약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다음 주자로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원장



과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을 지목했다. 정민주 기자

경남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011면 사람

한삼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창녕문화원장은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화식 창녕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한삼윤 원장은 “최근 강남 학원가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운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 운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박정선 창녕우체국장을 지목했다. 고비룡 기자



미신고 영유아 살인, 허술한 출생신고제 탓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으로 온 나라가 아연실색이다. 최근 알려진 영아 2명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친모사건은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출산 후 각종 핑계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죽여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자행하니 말이다. 지난해 5월에는 딸을 만 20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해마다 생기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벌인 미출생신고 영유아에 대한 정기감사 실태 결과를 보면 많은 영유아들이 출산은 됐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확인된 미신고 영유아는 모두 2236명이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이고 다음으로 경남이 122명으로 파악

됐다. 감사원은 확인된 미신고 영유아 중 학령기 아동, 보호자의 연락 거부 등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 23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 유기, 1명 유기 의심 등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미신고 영유아의 숫자가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생사 여부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미신고 영유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 출생은 했는데, 출생신고가 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아동인권보호단체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출생신고를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 중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에서 즉시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 지연 안 된다

정부가 진행하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이 부진하여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을 더 중시한다. 지난 9일 조찬 기도회에서는 “군경이 침략자에 맞서다가 초래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더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옥남 1소위원장은 6월 15일 유족회 대표들에게 ‘부역 혐의자’와 ‘부역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 등의 절차 없이 희생당한 이들의 혐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사실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진실 규명을 더디게 할 뿐이다.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최근 검사들은 재심 사유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항고로 대응하고 있는데 고령자인 희생자 유족에게 처리 지연의 고통만 줄 뿐

이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은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에 치우치고 있다. 6월 7일 현재 신청 현황은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9946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3986건이다. 하지만 진실 규명된 사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522건)에 비해, 군경이 가해자인 사건은 338건에 그쳐 불균형이 크다.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연로하므로 진실 규명과 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진실 규명 결정 뒤 다시 법원 소송으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과 1년 남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할 것이다. 희생자 유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1980년 9월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의 ‘신원 기록 일제정비계획’이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시행됐다. 그 결과인 ‘신원기록심사보고’에는 6.25 부역자, 자수자 명단, 6.25처형자와 좌익인 처형자 명단 등이 기록돼 있다.

오늘의 날씨

장마 시작부터 큰 비... 최대 150mm

26일 부산 울산 경남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80~150mm.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6월 26일 (음 5월 9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30	30	40	60	2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질
05:11 19:42	12:16 00:12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0:59 13:52	07:09 19:53
인천	09:34 22:08	03:21 16:04
포항	10:56 19:57	04:02 16:10
통영	01:42 14:25	07:59 20:17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남서	8-12	1~2
남해동부	남-남서	4-10	0.5~2
동해남부	남동-남	5-10	0.5~1.5
동해중부	남동-남	6-10	0.5~1.5
서해중부	남동-남	5-14	1~2.5
서해남부	남서-서	8-12	1~2

주간날씨

	27(火)	28(水)	29(木)
부산	☔ 23-26	☔ 22-27	☔ 23-26
울산	☔ 23-28	☔ 22-29	☔ 23-28
진주	☔ 22-28	☔ 22-29	☔ 23-27
김해	☔ 23-27	☔ 22-28	☔ 23-28
창원	☔ 23-27	☔ 22-28	☔ 23-27
통영	☔ 22-25	☔ 21-26	☔ 22-26
대구	☔ 23-31	☔ 23-31	☔ 24-30
세종	☔ 22-29	☔ 22-30	☔ 23-29
서울	☔ 21-28	☔ 22-29	☔ 23-27
제주	☔ 24-28	☔ 24-31	☔ 24-30